

박호석 두인 대표, 민주 중앙당 전국 장애인위원장 출마 선언

“장애인 옴부즈만제도 조성... 차별 문제 해결”

전북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전국 장애인위원장에 출마하며,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다양한 공약사항을 발표하며, 당선을 위한 당찬 포부를 밝혀 투표 결과가 주목된다.

전북 출신 사업가인 박호석 디자인 전회사 두인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며,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복지향상을 기치로 내걸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평화, 균형발전, 그리고 국민의 민생과 함께 한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위원장 후보로 나서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다”며, 자신은 “그간 더불어민주당과 늘 함께 해왔으며, 앞으로 장애인 기본교육, 기본 의료, 장애인 가족 기본소득을 민주당과 함께 만들어 장애인 권익옹호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자신은 “그간 친구들의 도움으로 자전거 뒷자리에 얻어 타며, 어렵게 학교를 졸업”하였는데 “그 당시 도움을 준 친구들에게 지금도 대단히 고마운 마음이며, 공동체의 도움과 관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소중한 경험”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대학에서 민주주의와 이 땅의 정의를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동지들과 늘 함께하며 투쟁해 왔으며, 졸업 후에는 지금까지 시민단체 활동을 이어오며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이 폭주할 때 서초동 집회를 전북지역

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내는 등 싸울 때는 싸울 줄 아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 속에서 균형감의 중요성을 잃지 않고 있으며, 지난 30년간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사람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깨달았다”라고 말했다.

자신이 생각하는 정치의 의미에 대하여 “가치를 잃지 않고 협상하면서 목표를 이루어나가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에 전국 장애인위원장에 출마한 이유는 “맨 먼저 장애인위원회가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정권교체의 선봉에 서야”하며, 자신이 위원장이 된다면 “시도당 장애인위원장, 장애인 단체 주요 인사들을 두루 만나고 조직을 활성화하여 정권 재창출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장애인위원회의 당내 위상을 더욱 높이고 당내의 협력 의의단을 조직하여 당면 현안 문제를 당과 소통하며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그리고, “장애인 당원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성 장애인 특파원 25시”를 만들고, 각 지역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통신원을 만들어 그들과 소통하며 필요한 정책들을 당과 함께 만들어가고 소통할 것”을 다짐했다.

그는 “장애인의 눈”으로 완전한 참여와 완전한 평등까지 실현하고 있는 복지국가 스웨덴처럼은 아직 안 되지만 우리도 장애인 기본교육, 장애인 기본 의료, 장애인 기본소득을 만들 것”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 장애인위원장 출마를 선언한 박호석 두인 대표가 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장애인 기본교육 등 민주당과 함께 만들 것” 협력의원단 조직 · 특파원 25시 등 공약 내걸어

이어 “그러하여 교육은 대학까지 무상, 의료는 1년 10만 원 상한제로 장애인 가족에게는 기본소득을 보장할 것을 주장”하며, “무엇보다 장애인 가족이 행복해야 장애인도 행복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장애인 옴부즈만 제도”를 제안하며, 이 제도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고 학교와 직장에서 그리고 생활 곳곳에서 장애인 차별에 대한 조성과 범정부 문제까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위원회가 있는 듯 없는 듯한 조직이 아닌 당내에서 주류가 되어 당이 필요할 때 함께 하고, 장애인 당원의 요구에 답이 응답하도록 적극 노력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다”며, “이번 선거에서 꼭 당선되어 새로운 장애인위원회를 만들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이번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전국 장애인위원장은 전국에서 4명의 후보가 출마 예정이며, 7일과 8일 후보자 등록을 받고 있다. /이만호 기자

안호영 국회 환노위원장

“민생 · 정책 · 국민 국감 선도”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장(더불어민주당, 완주 · 진안 · 무주)은 22대 국회의 첫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환노위원장으로서 대한민



국 국민 일터와 삶터가 안전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의 환경, 노동정책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민생 · 정책 · 국민 국정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집권 3년차 윤석열 정부의 후퇴하는 기후환경, 노동환경 정책을 지적하고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임금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 마련과 비임금 노동자 850만명, 청년층 356만명으로 전체의 42%를 해당하는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노동법 밖의 노동자에 대한 대책 마련과 문제점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산업재해가 4년 연속 증가세에 있는 노동 현장의 문제를 점검하고 걸그룹 뉴스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을 따져볼 계획이며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핵심 프로젝트인 기후환경법, 새만금의 수질 개선 문제도 환경 부문의 중요 정책 안건이 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은 8일 환경부를 시작으로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정기 전북자치도의원

향교 · 서원 조례 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이 ‘전북특별자치도 향교 및 서원 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하 향교 및 서원 조례)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도내 향교 및 서원의 전통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 총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지사가 연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또 향교 · 서원 전통문화발 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라 협의체가 구성되면 향교 및 서원의 전통문화를 진흥하고 계승함에 있어 향교 및 서원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가 자문에 참여함으로써 향교 및 서원 전통문화 진흥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만호 기자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최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가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 265회 임시회를 갖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8건, 이중 의원발의 제 · 개정 조례안은 익산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오임선 의원)을 비롯해 7건이며,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등 동의안 11건, 총 29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박철원 의원이 익산시 신청사 건립비 재원 조달계획과 조달 이행여부를 공개해야한다고 말했으며, 이종선 의원은 익산의 미래를 여는 도심항공교통(UAM)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손진영 의원은 광역수도 전환, 수도권정비기본계획 승인 절차 문제와 개선에 관해 발언했다.

또한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쌀값 폭락 저지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김순호 의원),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 삭감 반대 촉구 건의안’(양정민 의원)을 채택했다.

한편, 본회의 후에는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尹정부 들어 서해NLL 부근 중국어선 나포 줄어’

민주 윤준병 의원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현장을 찾아 “지난 단속은 중국 눈치 보느라 제대로 단속을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오히려 현 정부가 단속을 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 · 고창)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해NLL수역에 출몰한 중국어선 척수는 일 평균 94척으로, 5년 전인 2018년의 32척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서해NLL에 출몰하는 중국어선은 대부분 남한과 북한 간의 해역을 넘나들며 불법조업을 일삼는 어선들로, 우리나라의 영해 및 특정금지지역을 침범할 경우 나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윤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해NLL 인근에서 중국어선을 나포한 건수는 12건으로 2018년 20건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서해NLL 인근에 출몰한 중국어선이 3



배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동해역에서의 나포는 오히려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 서해NLL 외 다른 해역에서의 나포를 포함한 전체 나포 건수도 지난 정부와 비교하면 윤 정부 들어 크게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나포 건수는 해경과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을 모두 합쳐 총 258건으로 영해침범 7건, 특정금지구역 침범 17건, 무허가 25건, 제한조건 위반 209건 등이다. 반면 2023년 나포 건수는 영해침범 9건, 특정금지구역 침범 3건, 무허가 12건, 제한조건 위반 89건 등 총 113건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윤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2023년 나포 상황 지도’ 자료를 살펴보면, 영해침범 · 특정금지구역 침범에 따른 나포의 경우 2018년에는 서해뿐 아니라 동해 및 남해에서도 각각 2척의 중국어선을 적발해 나포 단속의 범위가 더 넓어졌다고 나타났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 교육 지속 가능성 정책 마련해야”

윤영숙 도의원, 도정질의 통해 현안 점검... “AI 기반 교육 인프라 해소 이뤄져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영숙(익산3) 의원은 7일 제41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기초학력 향상과 AI 기반 학습 도입 그리고 디지털 격차 해소 등 도내 교육 발전을 위한 방안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대응책을 점검했다.

윤영숙 의원은 기초학력 향상과 중 · 고 학력 신장 방안과 관련해 “초등학교에서의 기초학력 향상이 중 · 고등학교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서거서 교육감에게 물었다.

이에 서거서 교육감은 “초등학교에서의 기초학력 향상은 탄탄하지만, 중등에서는 교과 난이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학습량이 증가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학습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과 두드림학교를 통해 중 · 고등학생의 학습 동기와 자기주도성을 키우는 데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영숙 의원은 이어 AI 기반 맞춤형



차 우려를 표했다.

이에 교육감은 “AI 기술은 학생 맞춤형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교사들은 이를 통해 학습 데이터 기반으로 학생들에게 맞춤형 지도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모든 학생에게 최신 스마트 기기를 일괄 보급하고, AI 기반 미래 교실을 구축해 디지털 인프라 격차로 인한 교육 불균형을 방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디지털교과서와 스마트기기 보급에 따른 교육 효과도 짚었다.

윤 의원은 오는 2025년부터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와 스마트기기가 도내 교육에 미칠 긍정적 영향을 물었고, 서거서 교육감은 “AI 디지털교과서와 스마트기기 활용 수업은 교사의 수업 역량에서 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육청은 교사 연수를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스마트기기 보급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중단연구를 통해 학생과 교사의 학업 성취도 및 수업 역량 변화를 지속적으로 분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번 도정 질의를 통해 “기초학력 향상과 AI 기반 학습 도입 등 전북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교육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도정 질의는 도내 교육의 다양한 현안과 향후 발전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며, 교육청의 체계적이고 촘촘한 교육 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이만호 기자

‘심각한 국선변호료 연체... 올 2분기에만 31억원’

국힘 조배숙 의원

지난해 고령 · 빈곤 등의 사유로 국선변호인 선임 비중이 42%까지 커졌지만, 정작 국선변호인들은 제때 수임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체 법원 전수조사 과정에서 대구지법에서 최고 5억여원이 연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비례)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전체 법원 국선 변호료 연체 총액은 31억4,964만3,240원으로 집계됐다. 법원별 연체 순위를 보면 대구지법이 5억3,544만8,000원으로 가장 높았



고 창원지법이 4억1,651만3,120원, 통영지원이 1억 8,377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조배숙 의원은 “지속적인 국선 변호료 연체와 개선되지 않는 보수 체계 등은 국선 변호 수임 기회 현상으로 이어진다”라며 “결국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국가의 법률구조 서비스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 소방공무원 심리 건강 적신호... 찾아가는 상담실 부실 운영”

김희수 도의원, 도정질문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희수 의원(전주6 ·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제414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자치도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이 허술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이용 건수는 2021년 3,153건에서 2023년은 3,711건으로 17% 이상 증가했으나, 전문상담사 인력은 오히려 전년 대비 2명이 감소했다”며, “운영예산은 전년도보다 증액되었음



에도 인력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2023년 사업계획서상에는 16명의 상담사를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운영은 11명만 운영되어 전북소방공무원의 심리 상담에 소홀함이 드러났다”며, “이는 심리적 고위험군에 속한 소방공무원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자치도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2023년 전북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10명 중 6명(64.5%)은 위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등 심리적 고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전북 소방공무원들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 건강은 직무 수행에 직결된 사항이며, 이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일”이라며, “전북자치도는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정신 건강 지원 마련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